

쇄신 외친 오신환... 손학규 체제 '흔들'

바른미래 새 원내대표 선출 오, 김성식 누르고 과반 득표 "현 지도부체제 전환" 퇴진 압박 당 내분 정계개편 변수 부상



15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오신환 원내대표(오른쪽)가 소감발표를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새 원내대표에 오신환 의원이 선출됐다. 이는 개혁 보수를 지향하는 안철수-유승민계 연대에 사실상 중도-호남계가 완패한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24명의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원내대표 경선은 개표 시작 1분만에 승부가 갈렸다. 치열한 접전이 예상됐던 전망과는 달리 오 원내대표가 과반인 13표를 얻으면서 개표는 중단됐다. 그동안 당 안팎에서는 국민의당 출신 김성식의 의원이 1~2표 차 선승을 거둘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출신 정당별 분포를 보면 국민의당 출신 의원이 바른정당 출신 의원(8명) 보다 많기 때문이다.

오 원내대표가 당내 '소수'라 할 수 있는 바른정당 출신으로서 개표 도중 과반 득표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의당 출신 가운데 안철수계의 힘이 보태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원내대표 경선이 현 손학규 대표 체제의 재신임 성격을 띠면서 '공동 창업주'라고 할 수 있는 안철수계와 유승민계가 '현 지도부 퇴진'을 고리로 막판에 똬전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오 원내대표는 경선 과정에서 "현 지도부를 퇴진시키고 당을 자강·혁신으로 한 데 목졌다"는 공약을 내세웠으며 당선 직후에도 "당 변화의 첫걸음은 현 지도부 체제 전환이라 생각한다"고 말해 사실상 손 대표의 퇴진을 압박했다.

이에 호남 중진 의원들은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다. 호남-중도계인 김관영 원내대표가 당의 화합을 위해 퇴진했지만 안철수-유승민계가 실력 행사에 나섰다. 김은 "모 호남 중진 의원은 '어떻게 원내대표 후보가 대표 사퇴를 주장할 수 있나'라며 '당내에서는 '바른한국당'이 됐다'는 냉소마저 나온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은 "지난 의총에서 자강을 결의했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겠지만 손 대표의 퇴진을 둘러싼 내용 등 조만간 계기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반영하듯, 정치권에서는 보수대통합을 주목하는 분위기다. 이번 원내대표 경선은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출신인

바른정당계의 승리로 요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 원내대표부터 한나라당에서 정치를 시작하고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까지 새누리당에 몸을 담은 보수 정당 출신이다. 이에 따라 보수대통합을 위한 대화 채널은 만들어진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또 내년 4월 총선이 가까워지고, 바른미래당의 지지율이 상승하지 않는다면 이번 당권을 잡은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보수대통합 움직임이 가시화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당장은 보수대통합을 위한 움직임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오 원내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화합하고 자강하고 개혁해서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자강론을 내세웠다. 또 지난 8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김관영 전 원내대표의 사퇴 조건으로 한국당이나 평화당과의 합당이나 연대 없이 바른미래당 이름으로 총선을 치르기로 결의한 바 있다. 무엇보다 오 원내대표가 원내 정책을 수립하고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한국당에 기울어진 듯한 태도만 보여도 당내 호남 의원들이 강력하게 반발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오히려 오 원내대표의 당선으로 당내 호남 출신 의원들에 원심력이 작용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개혁 보수 정당으로 호남에서 정치적 생존이 어렵기 때문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민주 "진짜 민생 대장정 보여주겠다"

대장정 출정식... "현장 목소리 정책 반영"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민생'을 놓고 한 판 대결을 벌인다. 민주당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15일 국회에서 '진짜 민생 대장정' 출정식을 열고 민생 현장을 돌아보는 2주간의 일정의 첫 발을 뒀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9일째 전국을 돌며 진행하는 '민생투쟁 대장정'을 '가짜'라고 규정,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진짜'가 무엇인지 보여주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은 출정식에서 오는 31일까지를 '1차 민생 대장정' 기간으로 정하고, 앞으로 민생 현장에서의 간담회와 국회 토론회를 통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인들의 '밀박당 민심'을 청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해찬 대표는 "오늘부터 민생 투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을지로위원장은 "한국당의 '민생 투쟁 대장정'은 민생과 '투쟁'하며 대권을 향하는 대장정이자, 자기들만의 밥 그릇 투쟁 대장정"이라며 "황 대표의 백팩(배낭)에는 민생은 없고 고장난 나침반과 대권지도만 가득하다"고 비판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민생대장정 첫 일정으로 영등포구의 피자 가게 앞에서 가맹점주들과 간담회를 하고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 등 정부의 자영업자 지원 정책의 현장 체감도를 점검했다. 또 이날 말까지 주2회 이상 민생 현장을 방문, 간담회와 토론회를 열 계획인데 당 지도부는 물론 청와대 관계자들도 자리에 '민생 대결'에 힘을 실어줄 방침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문무일 검찰총장 수사권 조정 입장 발표

오늘 기자간담회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국회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대상으로 지정하고 입법을 추진 중인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검찰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힐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당초 14~15일 열린 예정이었다가 연기된 문 총장 주재 기자간담회를 16일 오전 대검찰청 중회의실에서 진행한다. 15일 밝혔다. 구체적 사항은 추가 논의 후 결정하기로 했다.

문 총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권 조정 법안의 핵심사항인 '검찰의 수사지휘 폐지'와 '경찰에 1차 수사중결권 부여' 등을 놓고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법안 내용이 그대로 제도로 자리잡으면 경찰 권한이 비대화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 13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밝힌 '수사권 조정 보완책'과 관련하여도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문 총장이 박 장관의 보완책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힐 경우 수사권 조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일각에서는 '실효적인 자치경찰제 실시'와 '정보경찰과 행정경찰 업무 분리' 등 기존 틀을 대폭 수정하는 수준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해 문 총장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관심사다.

/연합뉴스

3당 원내대표 교체... 패스트트랙 험로 예고

바른미래 사보임 당사자 선출... 평화당 의원수 확대 주장

15일 바른미래당 오신환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에 이어 여야 3당 원내서열 교체가 마무리됐다.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한 여야 4당 중 정의당을 제외하고는 모두 원내지도부가 교체되면서 패스트트랙도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특히, 새 원내지도부 취임을 계기로 여야 4당에서 모두 기존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선거제 개혁안과 사법개혁안에 대한 의견을 제기하면서 패스트트랙은 험로를 걸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바른미래당 오신환 신임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가장 큰 갈등을 불러온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당사자다. 오 원내대표는 경선 정견 발표에서 "(패스트트랙에) 왜 반대하는지(의원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지 않은 기형적 공수처를 반대한다"고 강조, 앞으로의 논의 과정에서 기존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또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 '교육지책'으로 함께 올린 두 개의 공수처법을 둘러

싼 갈등은 벌써 시작됐다. 민주당은 백혜련 의원 발의법안을, 바른미래당은 권은희 의원 발의법안을 내세워 충돌하고 있다.

향후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이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으면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모두 결국 분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온다.

선거제 개혁안 역시 벌써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봉책에 불과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논의할 때다"라며 "지역구를 그대로 두고 의원 수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평화당 유성엽 신임 원내대표도 의원정수 확대 주장을 꺼내 들었다. 유 원내대표는 전날 문화상 국회의장에게 취임 인사를 하면서 "완전한 연동형 비례제로 가기 위해서 '50% 세비 감축'을 21대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의원 수를 50명 늘리면 훨씬 국회 비용이 줄어들고 국회의원 특권이 내려가서 국민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애초 의원 수를 360명으로 확대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제 개혁안을 내놨던 정의당도 의원정수 확대 문제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며 앞으로 패스트트랙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문제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의원정수 확대는 불가하다는 입장이 확고하지만 지역구 축소에 대한 당내 이견이 만만치 않다는 평가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정기라운지

'5·18 기록물' 해외 자료 등 공개법 발의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



바른미래당 김동철(광주 광산갑)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 해외자료 수집 및 5·18 기록관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5·18 민주유공자 예우법'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외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의 수집 및 보관 ▲정부와 군이 보유한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공개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록관의 법적 근거 마련이다.

김 의원은 "외국 정부가 보유한 기밀자료를 확보한다면, 5·18 진실에 더 다가갈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법안의 배경과 필요성을 주장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한국형 연금 발전소 분양

(태양)

A 타입

식용달팽이 사육장(건물위)가중치 1.5배
100KW 월 270만원 예상(+1층 농장 임대비)

B 타입

미래형 100KW 550만원(예상)
현금투자대비(년 40% 수익가능)

최단 2년6개월 자금회수가능

모듈·LG·한화큐셀(단결정)

인버터·ABB(이태리)·카고(독일)

분양지역

- 경기도 안성시 잔여분 2기
- 영암 신북면 잔여분 5기 (선로 대기중)
- 영광 흥농 잔여분 3기

2019년 8~10월 준공예정

100년 기업

정직·신뢰

(주)해가온개발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87-8

정부지원 농·어촌 태양광 사업안내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 가능

80% 용자지원사업 / 선착순 접수

2018. 5. 1. 대통령령

농업진흥구역 규제완화

(전·답 가능)

- 한전과 20년 장기 계약 안정적 투자
- 99KW설치시 연금처럼 월250만원 꼬박꼬박 (25년동안 년평균 3,000만원)

부지 매입합니다(전·답가능)

- ▶ 실제 농·어업인에 한함(축산업 종사자 우선접수 합니다)
- ▶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 있으신 분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지!

전국대표 ☎ 1588-1543 · 010-3645-1479